

**안전한 <종태원\*> 노동당이 만들겠습니다**  
**결혼이 의무가 아닌 지역사회 노동당이 만들겠습니다**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 종로 이태원의 합성어. 남성 성소수자 관련 업소와 모임이 집중된 상징적 지역.

# 소수자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종태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잔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자들의 방해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3회에 걸쳐 좌절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반동성애법’을 시행하며 자국의 성소수자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일상적이 되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등을 혐오하는 이들의 만행이 날날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혐오 앞에 굴하지 않는 사랑의 연대를 이어나가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았고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로부터 정당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깊은 2014년, 노동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어느 선거보다 철저하게 성소수자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 6월 23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제정된 노동당 강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적 성정치를 실천한다.”

혐오보다 강한 사랑의 연대, 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 상시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를 통해 혐오단체 지원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노동당 소속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예산낭비 지자체장과  
관변단체를 통해



혐오단체로  
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예산감시를  
시행하겠습니다

### 개요

— 상시적인 지자체 예산감시를 통해 혐오단체 지원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 현황

- ‘바성연’을 비롯한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의 조직구성과 규모가 갈수록 체계적이며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성소수자 혐오단체에 직접적인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확인된바 없지만, 해당 규모와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외부로부터 투입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비용이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거나, 이미 상당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는 관변단체를 통해 우회지원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는 것과 다른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추진방안

- 노동당 지방, 광역 의원이 배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지방정부 예산 사용 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예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축소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도 혐오단체와의 관련성을 추적하겠습니다.

###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과



교육, 금융, 주거 등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해 차별시정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개요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역주민으로서 살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현황

—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이차별금지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제시한 20개의 차별영역 중에 재계와 종교계의 반대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이 삭제되었습니다.

— 차별금지와 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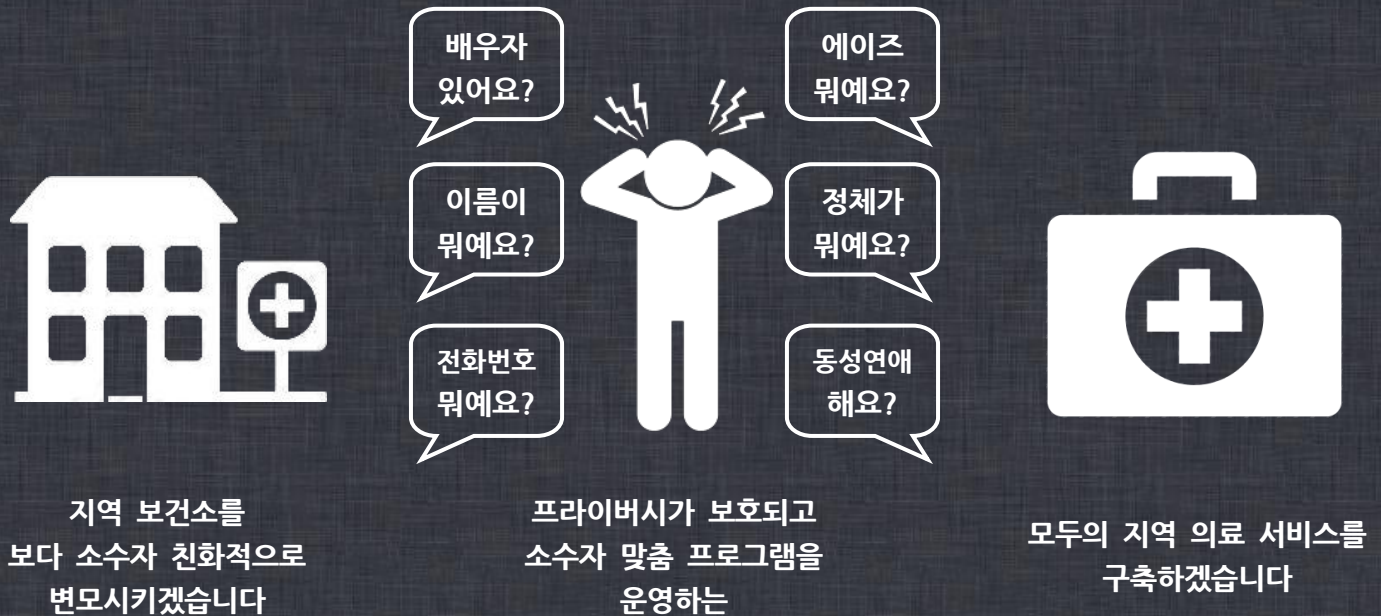
#### 추진방안

—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 고용(모집, 채용 및 퇴직 해고 등), 재화·용역(금융·의료·문화·교통·주거 서비스 등) 등의 공급이용, 교육(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자체 차별시정국을 설치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교육, 예방, 조사, 홍보,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매년 차별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친화적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개요

— 성소수자에게 맞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건강권을 증진하겠습니다.

### 현황

—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게 맞는 의료서비스, 성전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 동성간 성관계를 포괄하는 안전한 성에 관한 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추진방안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담당자를 교육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건강증진 매뉴얼을 작성해 각 보건소에 배포하겠습니다.
- 정신건강, 성병과 에이즈 등에 성소수자의 이해와 경험이 포함되도록 보완하고, 성전환 관련 상담과 처치를 담당하도록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 전문 상담 기관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정체성 고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과  
쉼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개요

—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10대 성소수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10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0대에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족,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인식함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수준과 자살시도경험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동성애 폭력경험(놀림, 아웃팅, 부당처우)에 대한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또한 성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가족과 학교에서 벌어졌을 때 집과 학교를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추진방안

- 10대 성소수자 전문 상담기관과 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 기존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과 가출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공 주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혼인관계 또는



혈연관계만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비혈연, 비혼인 등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결합을 포괄하는  
주택연대계약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 개요

— 주택정책의 기본단위인 '세대'를 혼인과 혈연관계로 한정하여 비 혈연관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황

— 비혈연 공동체는 주택 공급 개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기본 단위를 '세대'로 하고 있는데 세대는 주민등록법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사무편람 상에는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임,

세대는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며 타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어 친족 외에도 포함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 정책은 세대주의 정의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조).

— 현재 주택법상에서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만을 세대로 인정하고 주택공급의 단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소수자와 법적 의미에 담기지 않는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추진방안

—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연대계약"의 도입을 검토하여, 비혈연·비혼인 관계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4인가구 기준의 지역 행정

### 음식물 쓰레기봉투부터 고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4인 가구에도 벅찬  
최고 규격 2리터 봉투



1~2인 가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4인 가구만 생각하는  
지역 행정의 대표적 상징인  
최소 규격 2리터 봉투를



다양한 가구 형태를 모두 고려해  
음식물 규격봉투의 최소 규격을  
1리터 이하로 바꾸겠습니다

#### 개요

—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한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최소 규격을 2리터에서 1리터로 바꾸겠습니다.

#### 현황

—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특별·광역시는 구청, 도는 시·군청)이 발행합니다. 극히 일부 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최소 발행단위는 4인 가구 기준인 2리터부터 시작됩니다.

— 그러나 4인 가구에서도 2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워 쓰레기를 배출하기까지 그리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두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냄새 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구비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그러한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4인 가구에서도 2리터짜리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모으는 일은 골칫덩이인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 자녀가 없거나 동거하지 가구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더 큰 고통입니다.

—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거주형태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 지역 행정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서부터 바꾸겠습니다.

#### 추진방안

—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최소규격을 현행 2리터에서 1리터 이하로 변경하겠습니다.





# 노동당

## 성정치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sexualpolitics \_트위터

facebook.com/npplgbt \_페이스북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성적 억압에 대항하고 성별과 성적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내 퀴어 당원들과 여성주의자를 만나고, 성소수자 운동과 연대하면서 성을 둘러싼 문제가 인권과 평등을 쟁취하는데 중요한 의제임을 제시하고 이슈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보정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합니다.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과 성적체성에 따른 노동권 차별 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과 복지제도 개편!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제정!

1인 가구와 소수자의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

HIV/AIDS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